# 社 說

## 보사부는 무책임한 행정태도를 버려야 한다

### — 한의대생의 60여일간 수업거부를 지켜보며

일반약국의 한약조제를 사실상 허용한 보사부 '약사법 개정 시행규칙'이 입법으로 통과됨으로서 야기된 전국 한의대생 4천여명의 파업이 6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은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학교 한의대생 6백98명을 포함한 전국 한의대 파업학생들은 지난주 법정수업일수 부족으로 전원유급 사태를 맞으면서도 지난 24일 대학별 비상총회에서 '수업거부강행과 유급불사'입장을 거듭 결의하였다.

문제의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7호 조항'을 살펴보면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모호한 문구로 돼있는 규정이 실제로 약국의 한약조제를 제한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약국의 한약조제가 벌다른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한·양방의 기득권 차지는쟁이 아닌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대한 보사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안일한 태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4개월째 전국 한의대학생들은 당연한 권리이며 책임인 수업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사당국은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일 정부와 민자당은 한의학관련 당정협의결과인 '보건사회부 의정국 내 한의학과의 설치를 5월중으로 준비, 6월1일부터 출범', '약국내 탕약의 금지결정, 철약은 양단체와 협의결정'등 6개안을 한의학협회에 통고해왔다. 이에 한의학협회는 보사부에 협의결과에 대한 문의를 해본 결과, 실질적인 당사자인 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모르거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당정협의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일 수 밖에는 되지 않고 이는 보사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무책임한 행정태도를 되풀이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보사부의 이같은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이를 지켜보는 우리들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즉, 생존권의 문제를 단순히 한방과 양방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보사부가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음을 우리들은 인식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사당국이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시행을 유보하고라도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통해 정당성여부를 분명히 가려주어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하 많은 학우들의 잃어버린 배움의 기회를 반드시 되찾아 주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 학원가 프락치공작이 문민정부의 본질인가

### — 경찰의 미성년자 프락치고용 폭로를 접하며

지난 5월 25일 한총련 출범식을 이틀앞둔 상황에서 성균관대 총학생회에서 가진 경찰의 미성년자 학원 프락치 고용에 대한 기자회견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에도 여전히 프락치를 동원하여 학원가 주변의 정보수집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나이어린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주면서 프락치로 활동을 강요해온 사실은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개혁이 한낱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성균관대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故 김귀정열사 2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정보를 수집하던 중학교를 졸업한 17세의 소년의 진술에 동대문 경찰서 정보과 임모경사로 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하루에 1만원씩 받고 우리학교를 비롯 성대, 경기대, 단국대등 서울, 경기지역 10여개 대학에서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 출범식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것이다.

84년 학원자율화조치를 전후하여 대학에는 경찰이 학생복장을 하고 학생 행세를 하며 학원에 상주를 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가장 큰 나무위에 올라가 반정부구호를 두어번 외치고 유인물을 뿌린뒤 즉시 그자리에서 학내 상주하고 있는 학생차림의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그것이 당시의 가장 선도적인 시위문화였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소위 문민정부인 이도 개인과 단체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못한 현실은 어디서 기인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외세의 입김이 아직도 거세게 내적, 외적으로 불고있는 현 한국사회의 현실이 날로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창조적인 의식활동에 의한 자주적인 진출을 억압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로서는 힘들기에 안기부, 기무사등의 정보기관을 충동원하여야만이 권력을 유지,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로 교묘화, 세련화되고 있는 미국과 현 정권의 통치방식을 잘 꿰뚫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통치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바로 백만 청년들과 4천만 국민들의 힘과 지혜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아직도 우리 경희대학 주변에는 우리를 감시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정권을 유지하기위한 미국과 김영삼 정부의 궁여지책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개인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함과 동시에 총체적 코메디 공화국을 유지하고 있는 제2의 권력 안기부를 즉각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 매체비평 방송

## 문민정부가 낳은 또하나의 상업주의

드라마나 토크쇼, CF 등 TV에 정치인들이 다투어 얼굴을 내밀고 있는 요즈음 세간에는 누가지의 상반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하나는 권위주의의 구태를 벗고 정치인들이 직접 TV에 출연하는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서 신선하다는 것이고 그 다른 하나는 방송과 정치이 영합한 '문민상업주의' 바람이 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다. 지난 1월 SBS-TV의 주병진쇼에서 박희태 전민자당대변인을 게스트로 출연시켜 외외로 좋은 반응들이 나오면서 번지기 시작한 정치인 TV출연 바람은 각 방송사가 '정치인 모셔오기' 경쟁을 벌일 만큼 거세졌으며 이같은 현상은 문민시대 바람을 타고 더욱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TV에 출연한 정치인들은 신정당대표 박찬종의원 (MBC-TV. 오늘의 가정요리및 CF)을 비롯 이인제노동부장관 (KBS-2TV. 손자병법), 황산성환경처장관, 홍사덕민주당의원 (주병진쇼) 정대철민주당의원 (조영남쇼) 한완상통일원장관 (주병진쇼)등 10여명이 훨씬 넘는다. 또한이러한 정치인 끌어들이기 바람은 최고 권력자인 김영삼대통령까지 미쳐 방송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SBS가 창애자의낄을, KBS가 어린이날 특집을 각각 여주면서 그 성과를 부각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홍보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치인들의 계산과 이들 정치인들의 출연을 이용해 시청률을 높이고 따라서 광고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방송사들의 속셈, 그리고 그치 높은 사람으로만 보였던 모모라는 정치인들이 연기자들과 섞여 연기를 하거나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갖는 신선함과 일종의 쾌감, 이런 것들이 적당히 어우러지면서 정치인들의 TV출연은 방송의 '문민상업주의'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의 TV출현은 거의 여겨울 만큼 우스운 해프닝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많다. 장관을 극중에 출연시키기 위해 되지도 않는 극줄거리를 억지로 짜맞춘듯한 작위성에 심소가 나올정도며 드라마에 등장한 장관들의 대사는 하나같이 정부홍보에 급급해 있는 인상이다. 또한 토크쇼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전행자의 VIP대접에도 비위가 거슬린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인들의 TV출연은 문민시대가 낳은 신선한 충격인 것만은 틀림없다. 다만 이 신선한 충격을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시청률 경쟁 혹은 정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계산이 문제인 것이다.

강 동 완
(대중모니터링 모임회원)

## 왜곡을 덮어버리는 '원론'적 외교론

### 사론

### — 김영삼 대통령의 '신외교론'에 대한 고찰

'신한국'이란 이름아래 추진되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속에 또 하나의 분과적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지난 24일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식을 가진 '태평양 경제협의회' 제26차 총회 석상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밝힌 이른바 '신외교론'이 그것이다.

사실 신외교론이 각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기 보다는 원론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외교정책의 원론은 또한 애초부터 외교적 수사로 포장되는 것이어서 그 속내를 짐작키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외교론은 김영삼 정부의 국제정치에 대한 그리고 조국 통일문제에 대한 최초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것은 외교가 내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최근 진행되는 개혁정치의 외치(外治)적 성격을 가늠잡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신외교론은 '민주, 자유, 복지, 인권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이며, 이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 외교'라는 원칙적인 표현은 신외교가 궁극적으로 내치의 도덕성 회복의 바탕위에서 추진되는 중전의 이면임을 밝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과거의 외교가 도덕성, 또는 정부의 정통성에 흠을 가진 것이어서 소모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행태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거리낌없이 자기 몫을 찾는 외교들이 하겠다는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현저히 나타나는 것은 '인권'을 인류보편적 가치속에 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30여년간 군부통치 아래서 남한정부의 '아킬레스 건'은 정통성의 문제였고 그것은 달리 인권문제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국내 정치에서 더이상 인권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소극적인 자기 표명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적인 인권의 문제에도 나름대로 발언·대처하겠다는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 요컨대 신외교는 자기 방어적이고, 국내문제에 대한 해명성 외교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공격적인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문제에 집연하자면, 인권보장이란 단순히 정치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인권보장은 외부로부터의 인권침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권의 신장도 함께 포함하는 의미로 읽혀야 옳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직도 엄존하고 있는 '국가 보안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근본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근래의 개혁정치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은 바로 이러한 점, 즉 적용을 하지 않아서 감추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런 제도들을 척결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다. 불본 최근 '개혁의 실체'가 논한 바, 일의 선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제도적 정비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더불어 첨부해 둘 일이긴 하다만…

한편 통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단이후 한국의 외교는 남북 경쟁의 포로가 되어왔다. 이제 경쟁은 끝났다. 신외교는 한민족 전체의 장래를 위하여 현 분단상황의 관리,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남한정부의 외교정책은 그 공간을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간 경쟁을 '국외교로 단정하고 한민족 전체의 장래를 염두에 두는 것을 신외교라고 보고 있는 점이 하고 있는 점들은 북한을 동반자로서 보다는 아직 경쟁자로 여기고 있다는 정후들로 보인다. 특히 '인권'의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점은 되돌려 북한의 인권문제를 들어 통일의 장애물로 이용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점은 내내 미국 정부를 외교정책에서 써먹던 부분인데, 자칫 서구적 기준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북한의 정치를 따지려고 든다면 외외의 난관이 발생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김영삼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내의 개혁정치가 그러하듯 왜곡된 것을 원론적인 데로 되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 속에는 현재 85%에 달한다는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있으며, 그것은 종내 외교정책에 '자주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자신감과 자주성은 민족의 자신감과 민족의 자주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북한을 껴안는 방향의 것이어야 한다. 민족중심을 논하면서 내실은 남한 중심, 또는 경제력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남북한의 관계는 군사력 경쟁에서 경제력 경쟁으로 모습을 바꾼 것일뿐, 참된 경쟁의 종말은 아직도 요원한 것일 터이다.

배 병 삼
(본교강사·정치학)

## 정권의 정통성이 허용한 '인류보편적 가치'주장

### 외피만 바뀐 남북한 경쟁관계, 동반자로서 인식해야

'어느 장로의 고백'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 - 삼성

# 모든 건설의 원점은, 인간—

## 제2회 「건설논문상」 현상 공모

삼성종합건설은 건설분야 기술력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해 국내건설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설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응 모 요 강

1. 참가대상 ● 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전공불문)
2. 응모기간 ● 1993. 8. 20~8. 31
3. 응모주제(5개중 택일)
● 국민적/범국토적 건설업체의 바람직한 역할
● 부실시공 및 건실재해 방지대책
● 건설기술개발 문제점과 산·학·연 협력방안
● 선진업체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및 정부의 바람직한 건설정책
●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안
4. 응모요령
● A4용지 30~40매 내외 분량으로 워드프로세스이용 작성 제출(원고용지나 하교명이 표시된 리포트용지는 사용불가)
5.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3명)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장 려 상(6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6. 수상자 특전
● 당사 입사지원시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면제
● 우수상 이상 입상자 일본 선경건설사 견학기회 부여 (3박 4일)
7. 작품심사
● 1차 : 삼성종합건설 자체심사
● 2차 : 삼성종합건설이 위촉하는 각 분야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8. 입상자발표 ● 1993. 10. 9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9. 시 상 ● 1993. 10. 18(삼성종합건설 창립기념일)
10. 제출처
●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9 중앙빌딩 삼성종합건설 전략기획실 기획팀 (중앙우체국 사서함 8526, 우편접수가능)
11. 기 타
● 응모작품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국내외 저서나 논문을 이용할경우 반드시 위원을 밝혀야함.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삼성종합건설에 귀속되며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종합건설 전략기획실 기획팀으로 문의할것(TEL. : 727-0301~2)

SAMSUNG
삼성종합건설